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86호
2020.12.14

정책동향

■ 내년도 SOC 예산, 26.5조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英 기업과실치사법과 달라

산업정보

■ 일본 Lixil사의 공유가치 창출 전략

■ 건설 기능인력도 비대면 교육·훈련으로 전환 추세

건설논단

■ 주택정책의 '장이'와 '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내년도 SOC 예산, 26.5조원

- 도로·철도 인프라 위주로 증가, SOC 이외 건설 관련 사업도 다수 증액 -

2020년 SOC 예산, 당초 안보다 0.5조원 증액된 26.5조원

- 2021년 예산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58.0조원으로 확정됨(<표 1> 참조).
 - 정부는 지난 9월 1일 555.8조원으로 계획된 2021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7.5조원을 증액하고 5.3조원을 감액해 결국, 558.0조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의 이유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는데,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SOC 예산이 0.5조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2021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4.2%(3.3조원) 증액된 26.5조원으로 최종 편성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동예산 증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1> 2021년 정부 예산 재원배분 변동 내역

(단위 : 조원, %)

구분	2020 예산	2021 예산		증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 증감(C-B)	2020 대비(C-A)	증가율(%)
◇ 총지출	512.3	555.8	558.0	2.2	45.7	8.9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9.7	△0.2	19.2	10.6
2. 교육	72.6	71	71.2	0.2	△1.4	△1.9
3. 문화·체육·관광	8.0	8.4	8.5	0.06	0.5	6.3
4. 환경	9.0	10.5	10.6	0.1	1.6	17.8
5. R&D	24.2	27.2	27.4	0.2	3.2	13.2
6. 산업·중소·에너지	23.7	29.1	28.6	△0.5	4.9	20.7
7. SOC	23.2	26.0	26.5	0.5	3.3	14.2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22.7	0.3	1.2	5.6
9. 국방	50.2	52.9	52.8	△0.1	2.6	5.2
10. 외교·통일	5.5	5.7	5.7	△0.04	0.2	3.6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22.3	0.5	1.5	7.2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84.7	△1.8	5.7	7.2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12.02).

SOC 이외 지방의료원 확충, 임대주택 확대, 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사업 다수 포진

- 예산이 7.5조원 증액되는 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규모는 0.5조원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SOC 항목 이외에 지방의료원 확충, 임대주택 확대, 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표 2> 참조).
- 특히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큰 폭(3.2조원)으로 증가함.
 - 지방의료원 감염병 인프라 확충 : (2020) 1,264억원 → (2021안) 1,337억원 → (2021 최종) 1,433억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19만 → 20.9만호) : (2020) 5조 7,049억원 → (2021안) 7조 6,222억원 → (2021 최종) 10조 8,613억원(0.7조원 증액 + 2.5조원 기금 변경)
- 건물 그린리모델링,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의 예산도 증액됨.
 - 건물 그린리모델링 : (2020) 442억원 → (2021안) 4,501억원 → (2021 최종) 4,73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8.2만 → 8.3만호, 그린 스마트스쿨 715동 → 761동, 민간건축물 그린화 이자 지원 1.2만 → 5만호)
 - 풍력·태양광 : (2020) 0 → (2021안) 137억원 → (2021 최종) 401억원(도심·영농형 태양광 확대 213억원, 계통연계 인프라 확충 51억원 등)
 -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 (2020) 44억원 → (2021안) 116억원 → (2021 최종) 216억원(수소생산기지 등)
-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지원 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업의 예산도 증액되었음.
 -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지원 : (2020) 1,056억원 → (2021안) 1,397억원 → (2021 최종) 1,574억원, 4개 특구 추가지정(2020.11월, 23 → 27개 + 광주·울산·경남·세종) 소요
 - 지식산업센터 : (2020) 492억원 → (2021안) 560억원 → (2021 최종) 630억원, 7개소 신규 설치

<표 2> 2021년 정부 예산, 주요 항목별 증액 규모 및 건설 관련 사업

(단위 : 조원)

주요 항목별 증액 규모	금액	세부 항목 중 건설 관련 사업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3.0	-
감염병 대응 역량 극대화	1.0	지방의료원 감염병 인프라 확충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0.7	임대주택 공급 확충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	0.3	그린리모델링, 재해 예방 인프라, 수소생산기지 등
보육 돌봄 지원 강화	0.3	-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0.3	-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	0.1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 소상공인 지원	0.2	4차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추가 설치
농업 피해 예방 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0.2	-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 지역현안 대응	1.4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등 증액

주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2월 2일) 내용을 활용함.

국토교통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4,636억원 증액, 단 기금은 1,310억원 감액¹⁾

- 한편,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2020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됨(<표 3> 참조),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원)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정부안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됨.

도로와 철도 항목을 포함해 교통 및 물류 항목 예산 크게 증액

-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 변경사항을 살펴본 결과 도로와 철도 항목의 예산이 기존보다 각각 1,481억원, 2,901억원 증액됨. 교통 관련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액된 것으로 분석됨.
 - 도로의 경우 총 1,48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세종 고속도로(243억원),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8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5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20억원) 등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됨.
 - 철도의 경우 총 2,901억원이 증액되었음.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14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13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12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70억원) 등의 사업이 당초 계획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표 3>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확정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2020 본예산 (A)	2021 정부안 (B)	2021 국회 확정 (C)	변경 (C-B)	증가율 (C/A)
총계(총지출)		501,317	567,249	570,575	3,326	13.8%
예산 합계		204,963	231,348	235,984	4,636	15.1%
SOC	소계	187,172	210,403	214,994	4,591	14.9%
	□ 교통 및 물류	160,781	174,495	179,242	4,747	11.5%
	○ 도로	69,166	73,516	74,997	1,481	8.4%
	○ 철도	69,474	78,055	80,956	2,901	16.5%
	○ 항공·공항	2,691	3,518	3,564	46	32.4%
	○ 물류 등 기타	19,450	19,405	19,725	320	1.4%
	□ 국토 및 지역개발	26,391	35,908	35,752	△25	35.5%
	○ 수자원	5,531	8,107	8,126	△156	46.9%
	○ 지역 및 도시	17,757	23,845	23,387	19	31.7%
	○ 산업단지	3,103	3,956	4,239	△458	36.6%
복지	소계	17,791	20,945	20,990	283	18.0%
	기금 합계	296,354	335,901	334,591	45	12.9%

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2월 2일, 8월 31일) 활용하여 작성함.

- SOC 및 건설 관련 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둔화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임.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 SOC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박철한(부연구위원-igata99@cerik.re.kr)

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SOC 예산의 대부분(대략 80%)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英 기업과실치사법과 달라

- 보호 대상, 의무 주체, 처벌 규정 등에서 명확한 차이 존재 -

■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 후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 커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음(9월 22일 기준).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하고 있음.
 -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처벌 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본 법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업계와 중대재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간의 시각 차이는 뚜렷함.
 - 업계에서는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음.
 - 반면,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작업 중 실수가 아니라 근로 환경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라는 주장도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유사한 해외 사례 법률로 인용되고 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

- 제정 목적, 보호 대상, 의무 주체, 범죄성립 조건, 일반적 의무, 도급 관계 의무, 처벌 및 손해배상 등 항목별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기업과실치사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제정 목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목적은 유해·위험 방지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개인과 기업 및 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 등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데 있음.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 운영 및 관리 방식의 문제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에 기업에 대한 과실치사 등의 형사 죄책을 묻는 것이 목적임.

<그림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주요 항목 비교

항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목적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사고의 방지	대형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
보호 대상		시민과 노동자	명시되지 않음.
의무 주체	개인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무원	無
	단체	법인 또는 기관	기업, 정부자치단체, 경찰, 동업회사, 노동조합, 고용주 협회
범죄 성립 조건	재해 종류	사망 및 상해	사망
	중과실 유무	과실	중과실
일반적 의무		유해위험 방지 의무	주의 의무
도급 관계 의무		도급인 의무 = 수급인 의무	도급인 의무 ≠ 수급인 의무
처벌	개인	징역, 벌금, 공표	無
	법인	벌금, 행정제재, 공표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
손해배상		손해액의 3~10배	無

- 보호 대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는 시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에,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법의 집행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을 인명사고의 대상이 되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 시민으로 구분하지 않음.
- 의무 주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주요 의무 주체로서 법인, 기관과 같은 단체 외에도 사업주, 경영책임자,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기업과실치사법」은 과실치사 및 살인죄의 의무 주체로 법인, 정부 조직, 법 집행기관, 노동조합, 사용자협회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조직체의 구성원은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님.
- 재해 종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근로자 등 개인의 사망사고와 상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의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와 도급과 위탁 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기업과실치사법」 제2조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지켜야 할 주의 의무의 유형을 ① 종업원이나 종사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② 시설 및 부지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 ③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상업적 활동, 차량의 이용 등에 대한 주의 의무, ④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체포 및 구금된 사람에 대한 주의 의무로 구분하고 있음.
- 처벌 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음. 법인 등에 대해서도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1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반면에, 「기업과실치사법」은 주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을 활용하고

있음. 법인에 대한 벌금은 원칙적으로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지만,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손해배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징역, 벌금, 행정처분 등의 처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의 이하의 범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기업과실치사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도급 관계 의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5조에 따르면 도급 관계에 있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도급인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처벌 강화 외에도 건설산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절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대형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인임.
- 하지만,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개인 처벌 강화와 법인 등 기업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또한, 유사 사례로 인용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달리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업에 대한 과중한 처벌은 사망사고의 책임이 없는 기업의 다수 구성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 특히, 매출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손실은 추가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피고용인에게까지 처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음.
-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사안이며, 재해의 예방은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근간으로 해야 함.
- 옥외 산업이면서 다수의 현장이 운영되며, 인력 비중이 높다는 태생적 특성을 가진 건설산업은 안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 때문에, 타 산업과 비교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쏟아야 함.
- 건설산업의 안전문화 확산은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만 달성할 수 없음. 안전이 산업의 최고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 이행될 때 안전한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일본 Lixil사의 공유가치 창출 전략

-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비즈니스 전략 -

■ Lixil의 공유가치 창출 전략

- Lixil은 외장 및 내장 건축자재 생산을 전문으로 하던 Tostem, INAX, Shin Nikkei, SUNWAVE, Toyo Exterior 등 5개 기업이 2011년 통합하여 형성된 Water Technology, Housing Technology, Building Technology 등에 전문성이 있는 그룹임.
 - American Standard, GROHE 등 욕실과 화장실용 세라믹 제품의 세계적인 브랜드와 Super Wall, GL home, 피아스홈, 아이플 홈 등 일본을 중심으로 조립식 주택을 제조·공급하는 브랜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룹 전체의 2020년 회계연도(2019. 04. 01~2020. 03. 31) 총수입이 1조 6,944 억엔, 순이익은 125억엔임.
- 개발도상국에서는 화장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노상 방뇨가 일상화됐는데, 노상 방뇨는 식수로 사용되는 수자원의 오염을 초래해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됨.
 - Lixil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에도 9억명 정도가 노상 방뇨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5세 미만 아동이 매일 약 800명 사망함.
 - 개발도상국에서 화장실 부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고 여아의 학습 기회 박탈을 의미할 수 있음.
- 화장실을 구성하는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Lixil은 개발도상국의 위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SATO(Safe Toilet)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공유가치 창출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 SATO는 기존 화장실이 1회 세정에 사용하는 13리터에 비해 소량(0.2 내지 1리터)인 물로 분뇨를 흘려보낸 뒤, 악취와 해충을 막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닫히는 장치를 갖춘 변기로 구성됨.
 - Lixil은 SATO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위생 문제, 수질오염 문제 등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모두 현지화함.
 - 이를 통해 SATO의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고용할 뿐만 아니라 SATO 1대당 가격을 US 2달러 수준에서 유지함.
 - Lixil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430만대 이상의 SATO가 방글라데시, 인도, 잠비

아, 케냐, 우간다, 네팔 등 38개국에 공급되어 2,1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음.

- SATO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ICA),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캐나다 국부펀드인 Grand Challenges Canada가 운영하는 ‘Urban Sanitation Challenge’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음.
- SATO 보급에 일본 국민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Lixil사는 2017년 4~9월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사 제품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SATO 1대 기부를 대응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해 20만 8,805대를 기증함.

■ 시사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ESG 평가(E :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 : Social Responsibility; G : Governance)의 2020년 결과에 의하면, 건설기업은 사회책임경영 분야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C를 받은 대림산업을 제외하면, 삼성엔지니어링이 A+ 등급,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A 등급을 받았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재분배하기 때문에, 이익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처럼 지속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음.
-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 활동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채택되는 비즈니스 전략임.
 - Lixil의 SATO는 공유가치 창출 전략의 관점에서 경제적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수요를 시장에서 포획하는 것을 지향한 제품의 개발, 사업모델 구축 등을 포함하는 혁신임.
 - 이뿐만 아니라, Lixil은 변기 등 화장실에 공급되는 세라믹 제품 생산에 전문화된 지식과 자원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이나 빈곤층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SATO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성과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이, 공유가치 창출 전략에 내포된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개발, 신시장 개발 등의 혁신을 성취하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도 공유가치 창출 전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채택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공유가치 창출 전략을 통해, 환경과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건설 기능인력도 비대면 교육·훈련으로 전환 추세

- 향후 교육 형태로 사업주와 기능인력 모두 '원격' 선호도 높아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기능인력 교육·훈련의 변화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전염병의 발생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있어서도 '탈현장화(이하 OSC : Off Site Construction)²⁾'로의 빠른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의 변화는 현장의 건설 기능인력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 즉, 생산 방식의 변화로 숙련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재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방식과 커리큘럼 등에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설현장의 OSC는 기능인력에게 향후 다기능 운전자로서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³⁾ 그러나 현재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기능인력의 90%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기능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 비대면 교육·훈련 전환에 대한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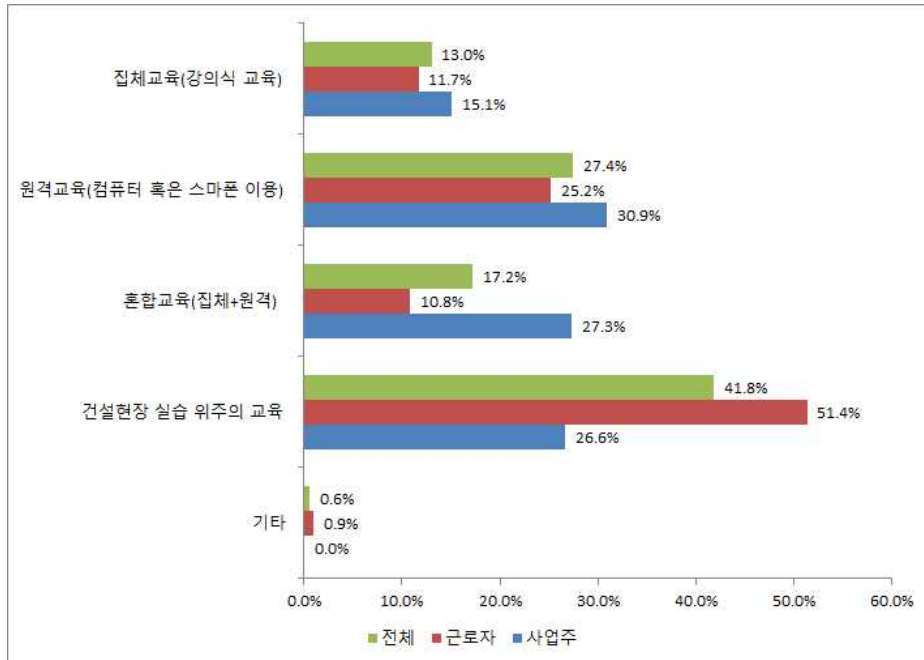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존의 집체 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비대면 방식 즉, 온라인 교육·훈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직종·수준별로 교육·훈련 과목의 표준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설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한 '향후 건설 기능인력의 교육 형태로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8%가 '건설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27.4%가 '원격 교육(컴퓨터 혹은 스마트 이용)'이라고 답함.
 - 특히, 사업주(30.9%)의 경우 기능인력(25.2%)보다 원격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 원격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 방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2) 탈현장화란 건설회사들이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부재 단위의 공장생산을 늘리는 방식 즉, 무인 현장 축진을 위해 모듈, 사전 조립, 자동화 및 기계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e대한경제(2020. 4. 13), [시론] 코로나19가 건설에 미치는 변화 예측, 이복남.

4) 신태중(2018), 「설문조사로 본 서울지역 건설현장 단순노무직 노동 및 생활 실태」, 서울노동권익센터.

<그림 1> 향후 건설 기능인력의 교육 형태로 선호하는 방식



주 : 본 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 기능인력의 수급 현황 및 훈련 수요 조사를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임. 설문은 총 374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사업주(종합건설업체 43부, 전문건설업체 99부)가 142부, 근로자가 232부를 차지함.

자료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 주요 직종 건설 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훈련 실태 조사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때, 건설 기능인력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과목을 선정해 온라인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후 보완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은 향후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 건설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건설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설업의 중장기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새로운 교육·훈련 방식의 성공적 안착 필요

- 건설업의 비대면 교육·훈련 방식은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효과성 측면에서 여전히 이견(異見)이 존재함.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훈련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임.
- 건설업의 중장기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교육·훈련 방식이 산업 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함.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주택정책의 ‘장이’와 ‘꾼’

우리는 흔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주로 ‘~장이’라는 표현을 활용한다. 국어 표준어 사전에서는 주로 손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고 하지만 장인(匠人)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장장이, 도배장이, 간판장이 등과 같이 특정 기술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사람을 친근감 있게 부르는 말로 많이 쓰고 있다. 반면에 ‘꾼’은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활용되며 노름꾼, 도굴꾼, 사기꾼 등 부정적 이미지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과열 현상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번지자 정부는 전세 물량의 공급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안정 대책을 지난 11월 19일 발표했다. 동 대책에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해 전세로 내놓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의 상업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 후 전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규제를 견디지 못해 매물로 나온 상업용 건물을 정부가 매입해 규제 정책에 대한 건물주의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이를 활용해 서민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호텔 등 빈 상업용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서민이 겪는 전세난과 주거 만족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지정해 238개 객실을 리모델링 한 후에 청년 주택으로의 공급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80여 가구에 가까운 입주 포기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입

주 포기의 주된 사유는 월 60만~70만원의 높은 월세와 원룸 형태의 호텔 방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난은 지난 7월 ‘임대차 3법’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주택정책 전문가들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셋값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며 전세의 월세 전환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필요 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주택정책 또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철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야 효율적인 주택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언제나 명(明)과 암(暗)이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득과 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를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협의와 조정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채 이미 시행된 정책의 부작용만을 가리기 위한 땀질식 정책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정책을 펼침에 있어 ‘장이’가 되는가, ‘꾼’이 되는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견 조율을 통해 정책의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듯하다. <경기일보, 2020.11.22>